

발 간 등 록 번 호

11-1250000-000038-14

남북대화

제75호 2010.1~2013.2

제1장 개관

제2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제3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회담

제5장 기타 남북대화 관련 동향

부록

1. 남북관계 주요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남북대화

제75호
(2010.1~2013.2)

목차 | CONTENTS

제1장 개관 7

제2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25

- 1.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10.9.30) 27
- 2.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8~9) 30

제3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35

- 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10.2.1) 37
- 2.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10.2.8) 40
- 3.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10.3.2) 45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회담 49

-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9.17) 51
-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9.24) 54
-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10.1) 55
- 4. 남북적십자회담('10.10.26~27)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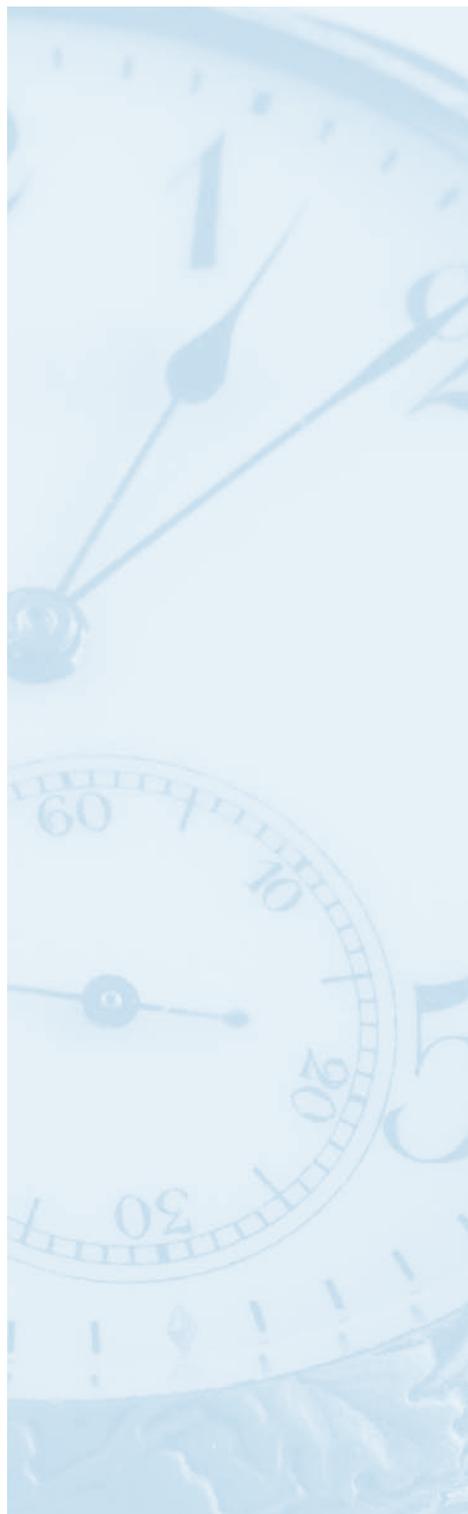
제5장 기타 남북대화 관련 동향 61

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10.1.19~21) 63
2.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10.10.30~11.5) 65
3.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민간 차원, '11.3.29, 4.12) 67
4.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1.12.17)과
민간 조문단 방북('11.12.26~27) 72

부록 75

1. 남북관계 주요일지 77
2. 남북회담 합의서 117

제1장
개관



이명박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강경조치를 지속하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특히 2010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더구나 북한은 대남 도발과 위협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대북지원과 관련된 경제·인도 분야 회담을 제의하는 등 근본적인 태도 변화 없이 과거 낡은 방식의 남북관계만을 고집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토대로 남북대화의 여건을 만들어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가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남북대화 개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2011년 2월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천안함 폭침을 부인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등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또한 2011년 6월에는 남북 비공개접촉을 왜곡하여 공개하는 등 남북 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있었다. 북한은 2011년 9월 이후 취해진 우리 정부의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연속”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말미암아 2010년부터 2013년 2월 말까지 남북대화는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2010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남북 당국 간 회담은 군사분야 2회, 경제분야 3회, 인도분야 4회 등 총 9차례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1회, 민간차원의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2회 등의 대화도 진행되어 정부가 이를 지원하였다.

2010년 상반기에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2.1)과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2.8) 및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3.2) 등 주로 경제분야 회담이 진행되었다.

2월 1일 개성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에서 우리측은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3통 문제와 관련 통행의 경우 전자출입체계 도입을 기반으로 ‘지정시간대 통행’을 ‘일 단위 통행’으로 바꾸고, 통관은 현재의 ‘전수조사’ 방식에서 ‘선별검사’로 전환하며, 통신은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우선 인터넷망부터 개통하고자 제의하였다. 또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는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운영하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북측 근로자의 수급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3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3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는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 문제를 협의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3월 2일 개성에서 개최된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효율적인 회담운영을 위해 3통 문제를 ‘통행·통관분야’ 및 ‘통신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3월에 전자출입체계 설치, 5월부터 전자출입체계의

1일 단위 통행 본격 시행 및 통관에 있어 선별검사 방식을 제의하고, 빠른 시일 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분야별 실무접촉 운영방식에 동의하면서도 3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측의 6.15 및 10.4선언 이행, 대북 적대 및 대결조장 행위 중지, 3통 관련 남북 간 기존 합의사항 이행 등을 주장하였다.

한편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지 1년 7개월, 개성관광이 중단된 지 1년 2개월여 만에 금강산 및 개성관광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서는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 3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은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실무회담 합의서(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개성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은 2010년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2010년에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남북 대화 여건이 매우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그리고 한 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이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조치」 발표 및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7.9) 등 북한에 대한 제재국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국방위 대변인 성명(7.24) 등 잇따른 위협과 대승호 나포(8.8)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남북관계 경색국면은 대한적십자사의 북한 신의주 수해지역에 대한 긴급구호물자 지원 발표(8.26) 등으로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9월 7일 대승호 선원 및 선박을 귀환시키고, 9월 10일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9월 17일, 9월 24일, 10월 1일 세 차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2010년 9월 17일, 9월 24일에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는 추석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행사를 진행할 것과,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진행하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을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재산 몰수·동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010년 10월 1일에 열린 세 번째 실무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였고, 북측도 이번 상봉행사만큼은 아무 조건 없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북측은 2010년 9월 15일 통지문을 통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9월 2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후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되었다.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우리측에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장소 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요구하였다. 남북은 차기 적십자회담을 11월 25일 개최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차기 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에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의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2011년 들어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한 남북대화를 공세적으로 연이어 제의해왔다.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우리 당국을 포함한 정당·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1월 8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면서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재개 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어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승지종합개

발지도총국,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등의 명의로 된 통지문을 우리측에 보내 「남북당국회담 실무접촉」,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단실무회담」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제의해왔다.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인 대화 공세에 대해 정부는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회담만 제의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②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였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진정성이 없는 것은 오히려 우리측(南)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2월 1일에는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을 최대한 빨리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예비회담 일정을 수정 제의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자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제39차 남북군사

실무회담」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실무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수석대표의 수준, 의제 등과 관련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심지어 북측은 “천안호 사건은 남측의 ‘특대형 모략극’이며, 연평도 포격전은 남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였다.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등을 빌미로 우리측에 대한 위협과 비난을 지속하였다. 또한 2011년 2월 5일 서해해상에서 우리측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하여 북한은 북한 주민 31명 전원의 송환을 요구하면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귀순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북한에 5월 4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북한 주민 4명의 자유의사 확인과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자유의사를 확인하는 문제를 함께 협의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2011년 3월 17일에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를 제의하고, 4월 27일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남북 역사학자들의 공동대처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 문제와 동해 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차원의 대화이고, 남북 간 협의 및 공동대처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따라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

가회의」가 3월 29일, 4월 12일 두 차례 문산과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쌍방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동 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아 학술토론회는 무산되었다. 또한 북한이 제의한 동해 표기 공동 대처 문제 협의에 대해 우리측이 5월 중순에 남북 역사학자들 간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다.

북한은 우리측의 남북대화 제의에는 호응하지 않고 2011년 5월 들어서는 우리측에 대한 비난과 위협을 강화하였다. 5월 9일 이명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독일을 방문,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한 이후 북한은 5월 30일에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과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6월 1일에는 ‘국방위원회 대변인 기자회견’ 형식의 발표문을 통해 ‘남북비공개접촉’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하였다.

북한의 ‘남북비공개접촉’ 왜곡 공개에 대해 우리측은 6월 1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논평에서는 “북한의 발표 내용은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으로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을 분명히 밝혔다.

2011년 하반기에 정부는 9월 19일 류우익 통일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당국자 간 안정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9월 21일~9월 24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방북 승인 등 비정치분야 교류협력 재개, 11월 8일 WHO를 통한 대북지원 재개, 11월 22일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등) 시행 등 대북 유연화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측의 이러한 유연화 조치에 대해서도 “대결정책의 연속” 등으로 비난하면서 호응해 오지 않아 남북대화 여건은 조성되지 못했다.

2011년 12월 17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였다. 정부는 2011년 12월 20일 통일부장관의 「정부 담화문」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 조문단은 보내지 않기로 하였으나, 故김대중 前대통령과 故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대하여는 북측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할 방침임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1년 12월 30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조문 방북을 차단했다”며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다.

우리 정부는 2012년 1월 2일 「대통령 신년 연설」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에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와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2월 1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등 노동당과 군사분야 기관 명의로 연이어 백서나 성명 등을 발표하면서 남

북대화 중단과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전가하고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와 우리 정부의 깊은 우려 표명과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월 13일에 이어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였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3년 1월 23일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제2087호)을 채택하였고,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포기’를 천명하면서 미국과 추종세력에 대한 ‘전면대결전’ 진입을 선언하였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유엔 결의안을 준수하고, 핵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만에 하나 북한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을 시도할 경우 도발 즉시 응징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것은 북한의 협박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일관된 안보 우선 정책의 일환이었다. 한편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를 가질 것을 북한에 지속적으로 촉구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물론 유엔을 비롯하여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오전 11:57 함북 길주군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 본문 내용중 ‘북한’과 ‘북측’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북측’이란 용어는 남북회담 진행시 상호 호칭에 사용

〈이명박 대통령 주요 대북제외〉

계 기	주 요 내 용
신년 국정연설 (‘10.1.4)	“올해는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하길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되고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남과 북 사이에 상시적인 대화를 위한 기구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북한도 진정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올해는 6.25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금년에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북한에 묻혀 있는 국군 용사들의 유해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91주년 3.1절 기념사 (‘10.3.1)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한을 단지 경제협력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당사자인 남북 간의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우리의 제안한 그랜드 바겐드 함께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이제 북한은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55회 현충일 추념사 (‘10.6.6)	“그러나 우리에게서 못 다한 꿈이 있습니다. 아직도 빈곤과 억압 속에서 고통 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통일조국의 꿈입니다.”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10.8.15)	“남과 북은 더 이상 불신과 대결로 점철된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이제 현실을 직시하여 용기 있는 변화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결이 아닌 공존, 정체가 아닌 발전을 지향해야 합니다. 주어진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서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선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나아가 남북 간의 포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의 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궁극적으로는 제도의 장벽을 허물고 한민족 모두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족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계 기	주 요 내 용
신년 특별연설 ('11.1.3)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향한 민족의 염원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핵과 군사적 모험주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북한은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의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았습니다. 대화의 문도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년 방송좌담회 ('11.2.1)	“무력도발이 아니라 진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로 나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것이고, 경제교류도 할 것이고, 6자회담에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
제92주년 3.1절 기념사 ('11.3.1)	“우리는 북한도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새 물결에 함께하기를 촉구합니다. 많은 나라를 돕는 대한민국이 같은 민족인 북한을 돕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제 핵과 미사일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야 적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신공항 백지화 관련) 특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11.4.1)	“북한이 진정성이 있으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세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러면 6자회담도 될 것입니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만나자고 하고 또 시간 끌고, 다시 일이 저질러지고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해왔습니다. 6자회담도 열고 일부 보상도 해주고 했지만 줄 것은 다 주고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을 해야 하며,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독 정상회담 기자회견 ('11.5.9)	“핵포기 문제에 대해 북한이 진정하게, 확고하게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와 협의한다면 내년 3월26일~27일 핵안보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대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제56회 현충일 추념사 ('11.6.6)	“언젠가 올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우리 국민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인내심을 갖고 진지하고 일관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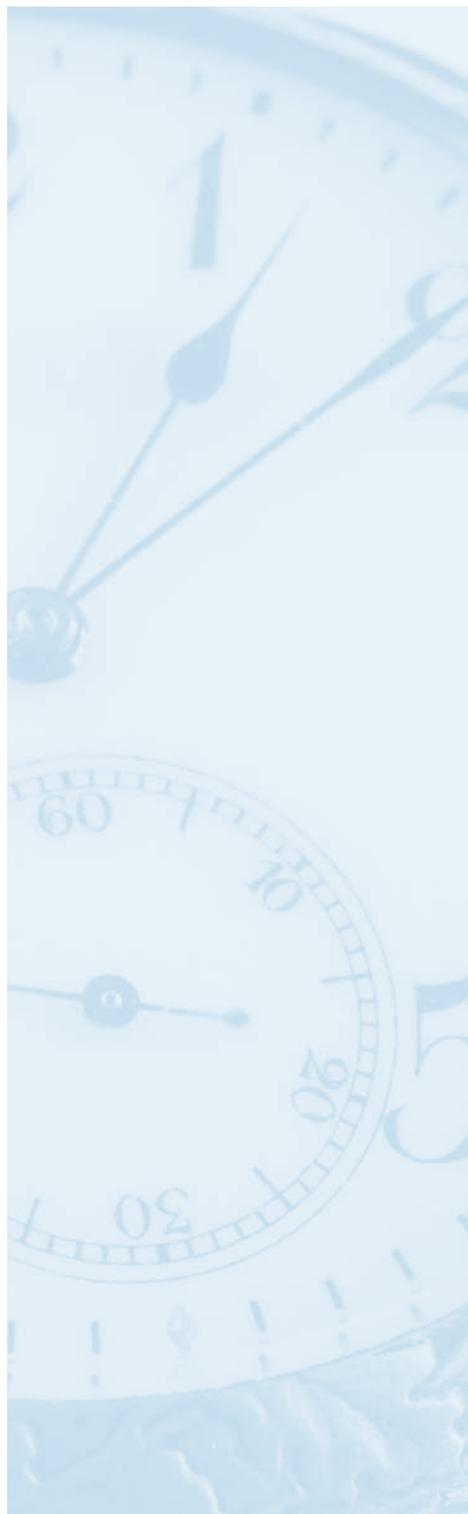
계 기	주 요 내 용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11.8.15)	“지난 60년 동안 남북은 대결의 시대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 를 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번영의 길로 함께 가야 합니다.”
국민과의 대화 (‘11.9.8)	“남북이 정상적 관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상회담을 한다면 서로 도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고 그 기본 위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공히 평화와 번영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정상회담은 언제든 지 할 수 있습니다.”
제66차 UN총회 기조연설 (‘11.9.21)	“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세계와 더불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반도가 더 이상 분열과 반목의 장이 아닌,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일구는 희망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정연설 (‘11.10.10) <small>*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small>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유연성을 갖되 ‘원칙 있는 남북대화’ 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보편적 인도주의와 동포에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회의 연설 (‘11.10.13)	“먼저 한반도에 평화의 기반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통일한국은 그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 국가들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향후 대응에 있어 매우 분명하고도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의 진전을 이루는데 있어 유용한 수단의 하나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북한과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11.11.19)	“북한이 모든 불법적인 핵 활동을 중단하고 재개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최소한의 신뢰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계 기	주 요 내 용
신년 국정연설 ('12.1.2)	<p>“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상생공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p> <p>“올해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이 진행 중인 핵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측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p>
취임 4주년 기자회견 ('12.2.22)	<p>“남북한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우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생각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대화는 물론 이웃 국가들과도 대화를 해야 합니다.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며, 대화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서 협력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있습니다.”</p>
제87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12.4.2)	<p>“이번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공식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지만, 각국 정상들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미사일이나 핵개발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 지도부에게 미사일 발사 계획을 철회하고, 북한 주민의 민생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p>
제8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12.4.16)	<p>“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p> <p>“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꽃피고 우리 민족 모두가 공동 번영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p>
제9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12.5.28)	<p>“어려움을 겪고 있는 2천만 북한 주민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진정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p> <p>“미얀마처럼 이제 북한도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소망합니다.”</p>

계 기	주 요 내 용
샌프란시스코 교민 간담회 (‘12.6.26)	<p>“대한민국은 힘이 있다고 해서 북한을 무력으로 무너뜨리고 흡수통합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개방하고 핵을 포기해서 서로 잘 살게 돼서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p> <p>“북한이 진정으로 개방해서 민생을 살피고, 인권을 신장한다면 세계 모든 나라가 도울 것이며,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북한과 협력하고 북한을 도울 것입니다.”</p>
제19대 국회 개원 연설문 (‘12.7.2)	<p>“북한은 하루속히 국제사회에 나와 협력해야 하고 남북이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미얀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열린 길을 택한다면 우리와 더불어 국제사회는 북한을 적극적으로 돕게 될 것입니다.”</p>
제67회 광복절 경축사 (‘12.8.15)	<p>“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p>
신년 국정연설 (‘13.1.1)	<p>“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마음과 삶속에 시작된 조용한 변화와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흐르길 소망합니다.”</p>

제2장

남북 군사분야 회담



1.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10.9.30)

가. 개요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3.26) 이후 우리측은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파견하여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전화통지문(‘10.9.15)을 통해 ‘군사적 합의 이행과 관련한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군사실무회담」을 9월 24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남북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는 입장에 9월 30일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수정 제의하였고, 북한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이 9월 30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문상균(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대령)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표	정소운(통일부 회담1과장) 김영철(합참 해상작전과장, 대령)	전창제(조선인민군 상좌) 홍석일(조선인민군 상좌)

나. 진행경과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민·군 합동조사단」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측의 소행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는 점을 지적함.
-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시인·사과하고, 사건 책임자를 처벌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서해상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측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함.
- 우리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등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북측은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함.

회담에서 우리측은 먼저 천안함 폭침 사건이 객관적·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북측의 소행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인 및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측 해역에 대한 북측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적 도발행위, 우리 당국에 대한 비방·중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북측은 우리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자신들의 해상경비계선을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북 전단살포 및 해상경비계선 침범에 대해 우리측(南)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남측은 민간보수단체들을 내세워 우리측 지역에 삐라를 살포하는 반공화국 도발행위를 감행함.
- 국제법과 쌍방 합의를 란폭하게 위반하고 있는 남측의 삐라살포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가담한 주범들과 단체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함.
- 남측은 귀측 해군함정들을 조선서해 우리측 해상경비계선에 침범시키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우리 경비함선들이 정상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기동할 때마다 남측 함정들이 대응기동하는 도발을 감행함.
- 남측이 반공화국 삐라살포와 해상침범행위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북남관계의 전도가 크게 좌우될 것임.

우리측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 북측은 우리측의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수용하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측은 우리측이 대북 심리전 및 전단살포 문제를 중단할 수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우리측은 북측이 제기하는 전단살포 문제는 그동안 북측에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음을 설명하였고, 우리 함정들의 북측 해상경비계선 침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함정들이 우리 해역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우리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였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하고 “국방위원회 검열단을 수용하라”는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담이 종료되었다.

2.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11.2.8~9)

가. 개요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3.26) 이후 8개월 뒤 그리고 「제38차 남북군사회담」을 개최한 지 2개월 만에 또다시 연평도 포격 도발(11.23)을 감행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서자 북한은 국면전환을 위해 남북대화를 연이어 제의해왔다. 2011년 1월 5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통해 우리 당국을 포함한 정당·단체들과의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1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북남 당국 간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자”고 주장하면서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 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대화공세에 대해 1월 10일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우리 국민의 희생을 초래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회담만을 제의하고 있는 바,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공세이자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였다.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2011년 1월 20일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남고위급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예비회담 일정을 수정 제의하고, 남북 간 협의를 거쳐 「제39차 남북군사실무회담」을 2월 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초 회담은 2월 8일 하루만 갖기로 하였으나, 협의가 길어짐에 따라 2월 9일까지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문상균(국방부 북한정책과장, 대령)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표	정소운(통일부 회담1과장) 김도균(국방부 북한정책과 중령)	전창제(조선인민군 상좌) 조철호(조선인민군 상좌)

나. 진행경과

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를 제기하였으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이 있어야만 남북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쌍방 군부 사이의 상호 도발로 간주될 수 있는 군사적 행동을 중지할 데 대하여’를 의제로 제기하면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만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강변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이미 여러 차례 진정한 남북대화와 협력을 위해 북측이 취해야 할 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이 같은 입장에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관한 확약을 제기하였음.
- 실무회담에서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하고 개최 일시와 장소, 대표단 구성 등 제반사항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관계 개선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다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남북관계에 얽혀있는 매듭을 풀어나가야 할 것임.
-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실무회담에서부터 진정성을 갖고 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에 대하여 책임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북측이 제기한 문제를 포함한 상호 관심 사안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석대표 수준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국방부장관과 인민무력부장 혹은 합참의장과 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고, 북측은 차관급인 ‘인민무력부 부부장 혹은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제기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의제와 수석대표 수준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북측이 제기하는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면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북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은 철저히 자신들과 무관한 사건이라

고 강변하면서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락극”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연평도 포격은 우리측이 “연평도를 도발의 근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였다.

우리측은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서 북측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밝히겠다는 내용이 명백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고, “동쪽의 머리 위에 포탄을 발사해 민간인이 사망하고 막대한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해놓고 도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하였다.

그러자 북측은 회담 2일차 오후 회의에서 우리측의 입장변화가 없다고 비난하면서, 갑자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밝히고 회담장에서 철수하였다.

제3장

남북 경제분야 회담



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10.2.1)

가. 개요

개성공단의 제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09년에 세 차례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동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남북이 합동으로 해외공단을 시찰할 것을 제의하였다. 북한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2009.12.12~22)을 실시하고 평가회의를 개최(2010.1.21)하였다.

남북은 위의 평가회의(제5장 p. 63 참조)에서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후, 이 회담을 2010년 2월 1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김영탁(통일부 상근회담대표)	박철수(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대표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정소운(통일부 회담2과장)	원용희(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오광욱(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리응식(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책임부원) 홍시권(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나. 진행경과

쌍방은 전체회의 1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4차례의 접촉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우리측은 지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10.1.21)에서

합의한 사실(제5장 p. 64 참조)에 근거하여 3통 문제와 근로자 숙소 건설 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3통 문제 중 '통행'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RFID)를 도입하여 '지정시간대 통행'을 '1일 단위 통행'으로 전환함으로써 남북 간 통행을 보다 간소하고 편리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통관'의 경우에는 '전수조사' 방식을 '선별검사' 방식으로 전환하고, '통신'의 경우에는 광케이블을 활용하여 우선 인터넷망부터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자고 제의하였다. 개성

〈우리측 기초발언 요약〉

- 지정시간 통행 방식을 1일 단위 통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전자출입체계(RFID)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의함.
-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입인원과 차량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통관 방식을 선별검사로 전환하되, 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축소할 것을 제의함.
- 개성공단은 유선 전화와 팩스에 의존하여 기업운영과 공단관리를 하고 있음. 공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이동통신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함.
- 개성공단 근로자 수요를 보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북측의 공급 능력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업들의 근로자 수요와 북측의 공급능력에 대한 정확한 사실 분석을 위해 근로자 수급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의함.

공단 북측 근로자 숙소는 우선 소규모로 건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함께 개성공단 관련 북측 근로자의 수급실태도 조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우리측의 제의에 대하여 북측도 3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3통 문제는 기본적으로 군부의 소관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남북군 사실무회담」을 열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임금·숙소 등 여타 현안을 협의하자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지난 번 진행된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통하여 북과 남은 공업지구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일련의 문제들에서 공통된 인식을 하였음.
- 특히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의 활성화에서 3통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고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북남군 부회담을 제기하는 주동적이며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였음.
- 남측도 오늘 접촉에서 우리가 제기한 노임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성의 있게 대하고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결실 있는 접촉으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왔으리라고 봄.
- 개성공업지구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용적으로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하고 훌륭한 결과를 이끌어내어 이번 실무접촉을 지켜보는 온 민족에게 좋은 소식을 안겨주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것을 언급하는 바임.

※ 우리측은 회담 명칭을 '실무회담' 으로 북측은 '실무접촉' 으로 표기

한편 우리측은 기초발언을 통해 북측이 서해 포사격을 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대하여, 이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우리측이 개성공단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반발하면서 서해 포사격은 정당한 군사연습이라고 강변하였다.

쌍방은 향후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열어 3통 문제를 협의한 후, 숙소와 임금 문제 등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인 「남북군사실무회담」 일자와 장소 등은 우리측이 추후 통보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10.2.8)

가. 개요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우리측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동 사건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고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진상규명 시까지 금강산관광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금강산관광을 중단하였다.

2008년 10월 2일 「제37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측 민간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러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개성공단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11월 24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12월 1일부터 개성관광 차단 등을 통보해오에 따라 개성관광도

중단되었다.

이후 금강산 및 개성관광 중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은 2010년 1월 14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 실무접촉」을 1월 26일과 27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당국자’ 참석을 요구하면서 2월 8일 개성에서 개최하자고 회담 날짜와 장소를 수정 제의하였다. 북한이 우리측의 수정 제의를 받아들임에 따라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10년 2월 8일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김남식(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강용철(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참사)
대표	이천세(법무부 통일법무과장) 박태영(문화관광체육부 관광정책과장)	주광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부원) 리경진(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과장)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회담에서 금강산 및 개성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3대 조건 즉,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 신변안전을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편 우리측 대표단은 기초발언을 하기에 앞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관광객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하고, 북측에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조의표명을 요구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무고한 우리 여성 관광객이 북측 군인의 총격으로 피격 사망한 데 대해 북측이 사과해야 할 것임.
- 사건 직후부터 우리측이 남북공동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북측은 우리측의 거듭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우리측 조사결과와 북측의 발표내용에 차이가 있음.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하여 양측 당국자, 전문가 포함한 남북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함.
-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지 시설의 안전강화 조치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이에 대해 북측은 “금강산관광객이 사망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한다”고 하면서도,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라는 등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우리측이 제기한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사건 발생 직후에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해명한 바 있으며,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 문제 역시 최고 수뇌부에 의해 확고히 담보된 만큼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을 반복하였다.

또한 북측은 「실무회담 합의서(안)」을 우리측에 제시하면서 개성관광은 2010년 3월 1일부터, 금강산관광은 4월 1일부터 재개하자고 주장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사망 사건 발생 시 사건경위가 어떠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사건의 진상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도 했음.
- 금강산관광객 사망 사건은 본인의 불찰에 의해 빚어진 불상사이며, 그 책임은 안전교육과 사고방지대책을 소홀히 한 남측에 있음.
- 금강산관광객 사망 사건의 진상을 다 밝혔고, 재발방지 및 남측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을 높은 수준에서 확고히 담보해준 만큼, 남측은 관광 재개를 위한 부당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빠른 시일 내 금강산 및 개성 관광을 재개해야 함.
-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남북관계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기를 기대하며 합의서 초안을 제의함.

이러한 북측의 금강산관광 재개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3대 조건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관광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측이 기존의 입장만 반복하여 구체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차기 회담 일정을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2010.2.8 실무회담 당시 北 제시 합의서 관련〉

- 정부는 금강산관광 14주년 다음날인 2012년 11월 19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008년 7월 11일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 중 북한군 초병에 의해 피살된 이후 금강산관광이 4년 넘게 중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였다. 또한 북한이 압류·동결한 우리측 재산권의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우리 정부가 제의한 금강산관광 관련 당국 간 대화에 북한이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해 북한은 2012년 11월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질의대답 형식으로 자신들이 당국 선에서 신변안전을 담보해 주면서 그와 관련한 합의서 초안을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회담장을 박차고 달아났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24일 조선중앙통신에서도 금강산관광 중단은 우리측(南)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등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 하였다.
- 우리측은 2012년 11월 26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2010년 2월 8일에 개최된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2009년 8월 17일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 면담 시 확고히 담보해 주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 하였고, 우리측이 신변안전을 당국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한 데 대해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은 당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그동안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당국 간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신변안전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할 사안이 아니라 남북 당국 간에 보장한 후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북한은 2012년 12월 8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진상 공개장을 통해서 금강산관광 중단과 그 책임, 그리고 신변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우리측을 비난하면서 무조건적인 관광 재개만을 거듭 주장하였다.

3.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10.3.2)

가. 개요

남북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10.2.1)에서 합의한데 따라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군사실무회담」의 개최 일정과 장소 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 당국 간 통신망을 통해 협의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북한은 「남북군사실무회담」으로 하되, 회담 장소는 토의 의제에 맞게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로 하자고 주장하였고, 우리측은 그간 「남북군사실무회담」 관례에 따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우리측은 3통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에서 장소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여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되, 대표단은 3통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해당 담당관으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측은 개성공단 담당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여하고 북한은 군사실무회담 대표단이 참여하는 형태의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2010년 3월 2일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한측
수석대표	이강우(통일부 관리총괄과장)	리선권(조선인민군 대좌)
대표	김정배(경의선 군운영단장) 김도균(국방부 육군중령) 마경조(통일부 서기관) 김현철(통일부 서기관)	조철호(조선인민군 상좌) 전창세(조선인민군 상좌) 강 일(개성공단 세관장) 리성수(개성공단 통행검사소장)

나. 진행경과

남북은 전체회의 2회, 분야별 실무접촉(통행·통관 분야 및 통신 분야) 각 1회, 수석대표 접촉 3회 등 총 7차례의 접촉을 통해 3통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을 위한 기본 입장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과 회담의 운영방식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회담운영 방식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행·통관 분야' 실무접촉과 '통신 분야' 실무접촉으로 분리하여 진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행 문제의 경우 '전자출입체계(RFID)'를 도입하여 상시통행을 할 수 있도록 3월에 전자출입체계를 설치하여, 5월부터 '1일 단위 통행' 방식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의하였다. 통관 문제의 경우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과 북은 개성공단 3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데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었음.
- 3통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해야할 통행제도 개선 관건은 전자출입체계(RFID)를 조속히 도입하고 1일 상시통행을 보장하는 것임.
-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자유로운 통신이 보장되어야 함. 인터넷은 우리측과 개성공단을 직접망으로 구축하고 이동전화는 기존망을 활용하여 개통하자는 것임.
- 통관방식은 전수검사를 선별검사로 전환하되 우선 50%부터 시작하여 국제수준인 2%까지 낮추어 나가야 함.
- 정세발언 관련, 북측이 NLL 이남까지 포함하여 해상사격구역을 설정하고 포사격하는 것은 정전협정 및 남북기본합의서 위반임. 민간단체의 전단살포는 자제시키려고 노력은 하나 한계가 있음. 또한 키리졸브 훈련·독수리 훈련은 연례적·방어적 훈련임.

신속한 통관을 위해 ‘선별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선별검사 비율은 50% 수준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검사대상을 축소해 나가자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신 문제의 경우 자유로운 통신보장을 위해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가 개성공단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실무접촉을 분야별로 운영하는 방식에는 동의하면서도, 3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측이 먼저 대북 적대 및 대결 조장 행위를 중단하고 ‘6.15 및 10.4 선언’, ‘3통 문제와 관련된 기존 합의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개성공단과 함께 동해지구에서의 3통 문제 해결을 위한 설비 및 자재·장비 명세서를 새롭게 제시하면서, 이를 우선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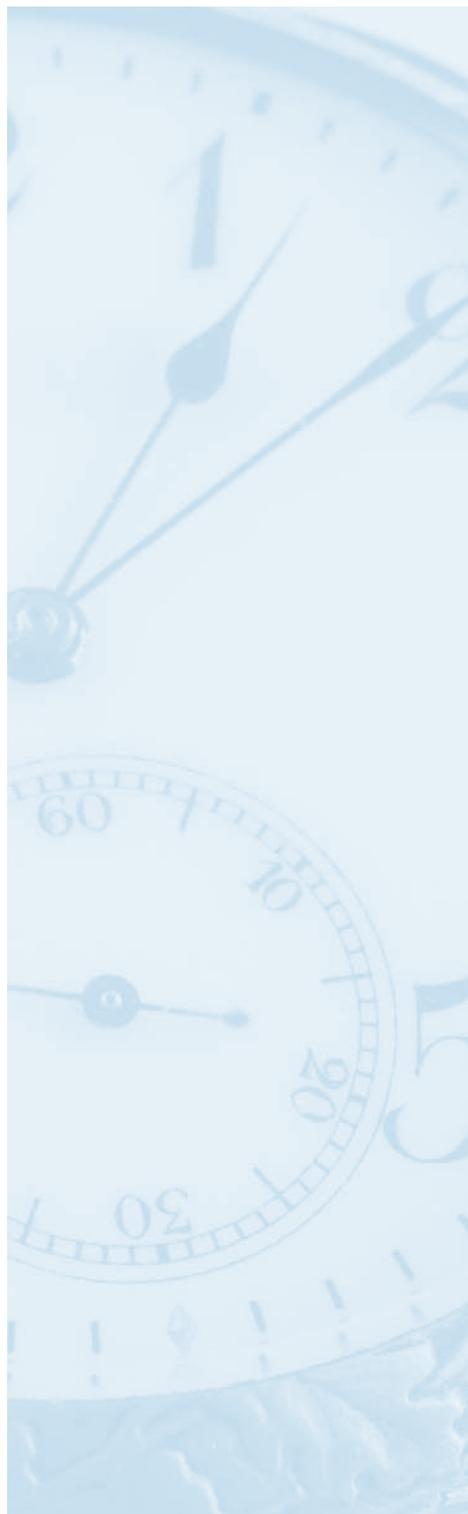
〈북측 기본발언 요지〉

- 3통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함.
- 지난 해 12월 이후 남측이 서해를 침예한 군사적 대결 마당화했음.
- 바라살포행위와 심리모략방송의 확대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중지 바람.
- 3월 8일부터 미국과 함께 진행하려는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임.
- 3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쌍방이 합의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선행시켜야 하며, 3통 실현에 필요한 관련 설비와 자재·장비 제공을 마무리하는 것임.

남북은 향후 분야별 실무접촉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되, 실무접촉 일자는 추후 확정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3.26), 연평도 포격 도발(11.23)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심화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실무접촉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제4장

남북 인도분야 회담



1.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9.17)

가. 개요

북한은 2010년 9월 10일 우리측 대한적십자 총재에게 보내는 통지문을 통해 추석을 계기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하면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9월 17일 개성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자고 답신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이 우리측 제의에 동의해 옴에 따라 2009년 10월 16일 이후 11개월여 만인 2010년 9월 17일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남북은 우선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쌍방은 상봉 일정과 생사확인의회 등 사전 준비절차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상봉 규모와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상봉 규모에 대해 우리측은 ‘기존보다 확대된 규모’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 반면, 북측은 전례대로 100명 규모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상봉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제의하였으나, 북측이 “상봉은 금강산지구 내에서 진행하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사용은 권한 밖의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별도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함에 따라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였다.

한편 우리측은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1년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 규모의 상봉을 정례화할 것을 제의하고,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도 반드시 협의·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상봉 정례화는 남북관계가 풀리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인도주의 정신으로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전쟁시기와 그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상호협력의 정신 하에 협의·해결해 나가야 함.
- 추석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관련 우리측은 10월 19일부터 24일 까지 금강산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할 것을 제의함.
- 생사확인 의뢰서는 9월 25일, 회보서는 10월 9일, 최종명단은 10월 12일에 교환하고, 상봉 장소와 숙박 장소는 전례에 따라 금강산지구 내 시설들을 활용하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 대한 위법 부당한 몰수 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내년부터는 정례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우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매월 1회씩 남북 각 100가족의 규모로 상봉추진 및 점차 상봉규모와 횟수를 늘려나가야 하고, 정례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생사확인과의 함께 서신교환이 이루어져야 함
-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우리측은 차기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10월 말경 개최할 것을 제의함.

면 좀 더 큰 회담에서 협의할 사안이라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9월 17일 실무접촉에서 합의되지 못한 사안들을 9월 24일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추석상봉과 관련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10월 21일부터 27일 동안 진행하며, 상봉규모는 전례대로 쌍방이 각각 100명 정도로 하고, 상봉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자수는 각각 200명씩으로 하고, 생사확인 의뢰서는 9월 21일, 회보서는 10월 6일, 최종명단은 10월 12일에 교환함.
- 상봉장소는 금강산지구 내로 하고 상봉순차는 관례에 따라 이번에는 우리측(北) 상봉자 100명이 먼저 남측 가족을 만나고 다음에 남측 상봉자 100명이 우리측 가족, 친척들을 만나는 순서로 함.
- 상봉일정은 2박 3일간으로 하되 상봉자들이 고령임을 고려하여 삼일포를 돌아보는 것은 그만두고 실내나 가까운 야외에서 집체 상봉을 함.

2.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9.24)

가. 개요

9월 17일 실무접촉에 이어 상봉장소 등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9월 24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 측	북 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남북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9월 24일 실무접촉에서도 지난 접촉 시 이견을 보였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장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우리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관광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로서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면회소에서 상봉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면회소를 사용할 수 없다면 북측이 구체적인 상봉장소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등 금강산지구 내 모든 시설이 몰수·동결된 만큼 면회소 이용을 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반복하며 면회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우리측이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제기하자, 북측은 10월 중순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고 ‘남북이산가족 상봉 정상화 등 인도주의 사업 활성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쌍방은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상봉장소 문제에 대해 계속 이견을 보임에 따라 차기 접촉을 10월 1일 개최하기로 하고 실무접촉을 종료하였다.

3. 남북적십자 실무접촉(’10.10.1)

가. 개요

9월 24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이후 다시 일주일 만인 10월 1일 세 번째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박용일(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대표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형철(조평통 서기국 책임부원)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인도주의 정신에 따라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우리측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우리측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한 북측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접촉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하면서도 이번 상봉행사 만큼은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러한 협의 결과를 토대로 남북은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과 차기 적십자회담 개최 내용을 담은 '남북적십자 실무 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합의서 요지〉

1.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10.30~11.5간 금강산에서 진행
 - ① 상봉규모 : 남과 북 각각 100명
 - ② 상봉일정 : 10.30~11.1 북측 방문단의 재남가족 상봉
11.3~11.5 남측 방문단의 재북가족 상봉
 - ③ 사전절차 : 생사확인 의뢰서(10.5), 회보서(10.18),
최종명단(10.20) 교환
 - ④ 상봉장소 : 이산가족면회소, 금강산호텔
 - ⑤ 선 발 대 : 상봉시작 5일 전 현지 파견
2.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해 10.26~27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 진행

4. 남북적십자회담('10.10.26~27)

가. 개요

10월 1일 개최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에 따라 「남북적십자 회담」이 2010년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진행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김용현(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최성익(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표	김의도(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 김성근(대한적십자사 과장)	박용일(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조정철(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부장)

나. 진행경과

우리측은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하였다.

우선 2011년 3월부터 매월 남북 각 100가족씩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상봉을 정례적으로 실시하자고 제의하였다. 또한 이미 상봉한 가족들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상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하였다.

상봉과 함께 2010년 12월부터는 남북 각 5,000명씩 이산가족들의 생사와 주소를 확인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2011년 1월부터는 남북 각 1,0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서신

교환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8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11년 4월부터 고향방문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도 제의하였다.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의 전면적인 생사확인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관련 내년 3월부터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남북 각각 100가족 규모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을 정례적으로 실시하며, 재상봉도 매월 남북 각각 50가족 규모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생사·주소 확인은 올해 12월부터 매월 남북 각각 5천 명의 이산가족명단을 교환하고 이들이 신청한 가족의 생사와 주소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알려줄 것을 제의함.
- 생사와 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끼리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기초로 서신교환 사업을 내년 1월부터 매달 1천 명 규모로 실시하자는 입장임.
- 80세 넘는 고령 이산가족들을 우선 대상으로 내년 4월에 적절한 규모로 고향방문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함.
- 정례적 상봉과는 별개로 생사·주소가 확인된 이산가족들에게 본인 이 희망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쟁 시기 및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생사·주소 확인사업이 전면적이고 조속히 진행되어야 하며, 이들이 귀환하여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에 대해 북측은 남북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한다고 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한 해에 겨우 한 번 정도나 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하되 설명절과 청명, 추석 등 민속명절들을 기본으로 하여 3~4번 정도 하자는 것을 제의함.
- 금강산에서의 가족상봉과 함께 화상상봉, 영상편지교환사업도 적절히 배합하여 진행해나가며, 상봉자수는 지금의 현실적 조건에 맞게 쌍방이 각각 100명 규모로 하면 될 것임.
- 인도주의사업 활성화를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는 문제 관련 쌍방이 이미 합의한 대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비롯한 물수 동결된 남측 부동산 문제와 관광 재개 문제와 관련한 해당 당국 사이의 실무회담이 시급히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함.

북측의 쌀·비료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측은 대규모 대북지원은 적십자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국 차원에서 검토할 사안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금강산관광 문제는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로, 상봉 정례화와 직접 연계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남북은 상호 제기한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11월 25일 개최하여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회담을 종료하였다.

그러나 차기 「남북적십자회담」을 이틀 앞둔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자행함에 따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북한에 통보하였다.

제5장

기타 남북대화 관련 동향



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10.1.19~21)

가. 개요

2008년 3월 북한이 억류한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문제와 개성공단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2009년에 세 차례 개최(「남북대화」 제74호 pp. 29~43 참조)되었다.

우리측은 동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발전을 위한 남북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을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공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남북이 합동으로 해외 공단을 시찰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를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남북 각각 10명으로 구성된 공동시찰단이 2009년 12월 12일부터 22일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중국과 베트남 공단을 시찰하였다.

공동시찰단은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을 비롯한 북한 관계자 10명,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우리측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시찰단은 12월 1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13~14일 칭다오(靑島) 경제기술개발구, 15~16일 쑤저우(蘇州) 공업원구, 17~18일 선전(深川) 경제특구, 19~22일 베트남 옌퐁공단 등 총 9개의 공장과 3개의 공단관리위원회, 그리고 출입사무소를 포함한 6개의 관련 기관을 시찰하였다.

나. 진행경과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후 북측은 2010년 1월 5일 「개성공업지구 실무접촉」을 1월 19일과 20일에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1월 7일 우리측은 당국 간 실무 회담을 갖기에 앞서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방향과 공동 해결과제 도출 문제 등을 토의하기 위한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결과 평가회의」부터 우선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를 2010년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에서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김영탁 수석대표(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외 7명, 북측은 박철수 단장(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9명이 참가하였다.

우리측은 평가회의를 통해 개성공단 현안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또한 차기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3통 문제와 숙소 문제를 의제로 하여 2010년 2월 1일에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측은 차기 실무회담에서 3통 문제와 숙소 문제 이외에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인상 문제가 반드시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북 간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추후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문제조차 타결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으나, 북측은 우리측 대표단이 서울로 출발하기 직전에 2월 1일 개성공단 실무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로써 남북은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2월 1일에 개최(제3장 p. 23 참조)하기로 합의하고 평가회의를 종료하였다.

2.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10.10.30~11.5)

가. 개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009년 및 2010년에 두 차례 진행되었다. 2009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8.26~28) 합의에 따라 2년 만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재개되었다. 그 결과, 9월 26일부터 10월 1일 우리측 97가족(126명)이 북측 가족 228명을, 북측 98가족(106명)이 우리측 가족 428명을 각각 만나 남북 총 888명이 상봉하였다.

2010년에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9.17·24, 10.1)에서의 합의에 따라, 전년에 이어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0월 30일부터 11월 5일 사이에 우리측 94가족(137명)이 북측 가족 203명을, 북측 97가족(110명)이 우리측 가족 436명을 각각 만나 남북 총 886명이 상봉하였다.

나. 진행경과

2010년에 우리 정부는 세 차례의 「남북적십자 실무접촉」(9.17·24, 10.1)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행사 문제를 북측과 협의하였다. 남북은 10월 1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10.10.30~11.5) 실시와 차기 적십자회담('10.10.26~27) 개최 내용을 담은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를 채택하고 접촉을 종료하였다. 합의에 따라 남북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는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화가 심화(남북이산

가족 찾기 신청자 중 70세 이상이 전체의 79.6% 차지)됨에 따라 일회성 상봉행사로는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같은 인식 하에서 정부는 2009년 및 2010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전면적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상봉정례화, 상시상봉, 고령 이산가족의 고향방문 및 자유방문 실현 보장 등을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그 후 남북은 2010년 11월 25일 「남북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도적 문제 협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남북이산가족 문제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인하여 기 합의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가 무산되었다.

2012년에 들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 긴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남북이산가족 상봉 문제 협의를 위하여 두 차례(2.14, 8.8)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제의하였으나, 북한의 거부로 접촉이 무산되었다.

남북이산가족의 상시상봉을 가능케 할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착공된 지 2년 11개월 만인 2008년 7월 12일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쳤다. 금강산관광 특구 내에 위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연면적 19,835㎡로 지하 1층·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동으로 구성되었다. 면회소 건물의 경우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이 있어 최대 1,00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이로써 남북이산가족 간 상시적인 만남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확보되었으나,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면회소 개소 및 운영 등 관련 일정이 잠정 보류되었다. 그 후 북한이 우리측에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의 몰수 조치

(‘10.4.27)를 하였으나,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에서의 합의(‘10.10.1)에 따라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회소>에서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10.10.30~11.5)가 개최되었다.

3.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민간 차원)

가. 제1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11.3.29)

(1) 개요

일본 대지진 등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사례가 잦아짐에 따라 한반도의 최고봉인 백두산 화산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던 시점인 2011년 3월 17일 북한은 우리측에 전화통지문을 통해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를 제의하였다.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남북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선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를 3월 29일 우리측 지역인 문산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가 2011년 3월 29일 문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측	북측
수석대표	유인창(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윤영근(화산연구소 부소장)
대표	김기영(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이윤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장성렬(화산연구소 실장) 주광일(조선지진화산협회 위원)

(2) 진행경과

회의에서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활동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중점을 두고 공동연구에 앞서 사전 '선행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백두산 화산활동 실태파악을 위한 자료교환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자료교환을 바탕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방식 등을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이번 회의의 성격을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남북전문가 간 회의로 규정할 것을 제시함.
- 회의의 기본임무는 과학적 조사를 통해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을 규명하고, 공동의 연구결과물을 산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백두산 일대에 대한 자료공유 및 관련 자료 분석·평가, 공동조사 등 전반적인 공동연구 수행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 제안함.
- 전문가 차원의 회의인 만큼 자유로운 토론형식의 진행을 요구함.

북측은 백두산 화산활동에 대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남북전문가 간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고 현지에 나가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식의 공동연구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회의에서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차기 회의 날짜와 장소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백두산 화산 연구사업은 남북 어느 한 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민족에 있을 수 있는 재난방지 문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협력사업의 적극 추진과 백두산 화산 문제 관련 학술토론회의 필요성을 주장함.
 - 과거 백두산 화산과 한라산 화산에 대한 남북 화산전문가들의 연구경험 공유가 필요함.
 - 백두산의 지리적 특성과 관측상황 등 파악을 위한 쌍방 전문가들의 백두산 현지 탐사 실시를 제의함.
- 남북 화산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항목 설정 후 연구진행, 연구현황 통보 및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의 백두산 화산연구 심화방안을 제시함.
 - 공동연구 항목으로서 화산성 지진활동, 지구물리학적 및 수문 지구화학적인 변화, 지각변동 상태 등 예시

나.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11.4.12)

(1) 개요

3월 29일 회의 결과에 따라 우리측은 2011년 4월 6일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를 4월 12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고, 이를 북한이 수용함에 따라 제2차 회의가 4월 12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개최되었다.

<쌍방 대표단 명단>

구분	우리 측	북 측
수석대표	유인창(경북대 지질학과 교수)	윤영근(화산연구소 부소장)
대표	김기영(강원대 지구물리학과 교수) 이윤수(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이강근(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장성렬(화산연구소 실장) 주광일(조선지진화산협회 위원)

(2) 진행경과

회의에서 우리측은 백두산 화산의 현 실태파악에 중점을 두고 북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북측은 화산활동 징후와 관련, 예년에 비해 최근 백두산에 지진현상 등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토론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남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5월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후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우리측 기초발언 요지〉

- 백두산 화산 문제 접근방식 관련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함.
 - 첫째, 백두산 화산 문제는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
 - 둘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
 - 셋째, 남북 간에 신뢰와 협력 필요
- 백두산 화산 남북공동연구를 크게는 2단계로, 작게는 4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에 앞서 ‘선행연구’ 필요
 - 선행연구로서 백두산 화산활동에 관한 자료공유 및 분석, 이를 바탕으로 백두산 현지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
- ‘본 연구 단계’는 3단계로 구성할 것을 제의함.
 - 1단계는 ‘기초탐사단계’, 2단계는 ‘정밀탐사단계’, 3단계는 ‘통합 예측체계 구축단계’이며, 각 단계가 마무리되는 즈음에 「학술토론회」 개최
- 이번 회의에서 우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백두산 화산의 현재 상태가 밝혀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북측 기본발언 요지〉

-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관련, 남북학술토론회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함.
 - 오는 5월 초 평양에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 토론회’ 개최
 - 남북 화산전문가 각각 10명 정도 참가, 토론자는 각기 편한대로 선정
- 백두산 현지답사 일정 및 답사방식 등을 제시함.
 - 현지답사 시기는 6월 중순경으로 하여 남측 화산전문가 5-6명 규모로 일주일 정도 실시
 - 우리측(北) 전문가들과 공동답사 형식으로, 백두산 천지와 그 일대 화산징후 등 대상으로 진행
- 기타 남북학술토론회 및 현지답사 관련 왕래경로 등 구체적 실무절차와 방법상 문제들은 향후 쌍방 간 협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함.
- 남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백두산 화산 관련 자료교환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임.

〈합의서 요지〉

1.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초에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
2.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답사를 6월 중순에 진행
3. 구체적 실무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

우리측은 합의서에 따라 2011년 4월 28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서울 또는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발송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답신을 보내지 않음에 따라 남북학술토론회 및 백두산 현지답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4.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11.12.17)과 민간 조문단 방북('11.12.26~27)

가. 개요

북한은 2011년 12월 19일 12시 조선중앙TV 특별방송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에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은 당·정·군 주요 인사 총 232명으로 구성된 장의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12월 17일부터 29일까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12월 28일 평양에서 영결식을 진행하였다.

나. 정부의 조치사항

우리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직후,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상 국무회의를 개최한 후,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동요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전 유지를 위해 관련 국가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2월 20일에는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 후 통일부장관은 「정부 담화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고, 북한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아 남북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담화문 요지〉

- 정부는 김 위원장 사망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함.
- 북한이 안정을 되찾아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
- 북한이 애도기간에 있음을 감안, 전방 성탄트리 점등 유보를 중 교계에 권유
- 정부는 조문단을 보내지 않을 것임. 다만故김대중 前대통령과故정몽헌 회장 유족에 대해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 방북 조문을 허용

또한 정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남북관계 조치로서 북한 체류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관리체계 가동에 들어갔다.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여부 등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성공단의 현지상황실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이후에도 개성공단은 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정상적으로 출·입경을 실시하였고, 개성공단도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였다. 다만, 개성 만월대 조사단 등 개성공단 이외의 체류인원은 귀환 조치시켰고, 기타 예정되어 있던 방북 건은 잠정 보류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 민간 조문단 방북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로故김대중 前대통령과故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에 대해 방북 조문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故김대중 前대통령과故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측에 한해서 조문을 허용하였다.

북한은 12월 22일 관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서 우리측 조문단의 육로 방북에 대해 동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희호 여사측 13명과 현정은 회장측 5명으로 구성된 민간조문단 일행 18명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방북하였다.

이번 민간조문단 방북은 북한의 조문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이루어진 순수한 조문 목적의 방북으로서 민간조문단은 방북 당일인 12월 26일 오후에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조문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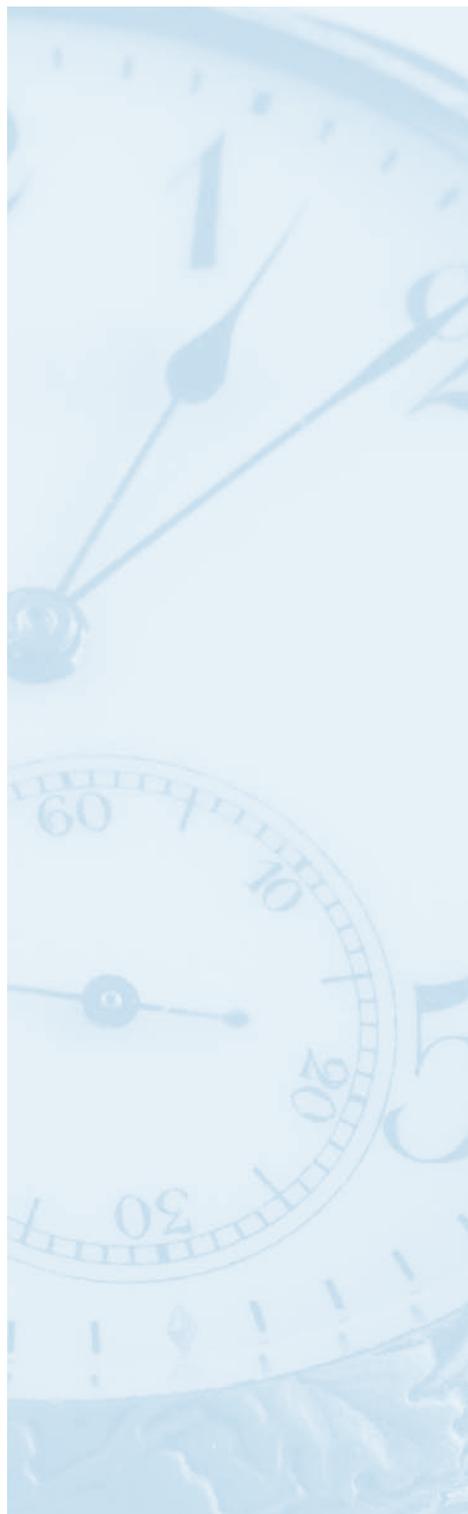
한편 민간조문단은 귀경 당일 오전에 김영남 북측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초청으로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으며, 귀경길에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을 둘러보았다.

한편 정부는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였으며, 팩스나 우편을 통한 조의문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상의 북한주민(간접) 접촉의 신고·수리절차를 거쳐 총 76개 단체가 조의문을 발송하였다.

※ 북한의 조문단은故김대중 前대통령의 국장(國葬) 기간인 2009년 8월 21~23간 서울을 방문하여 조의를 표하였으며,故정몽헌 현대그룹 회장의 장의 기간 때는 조전과 함께 금강산에 세워진 추모비에 북한 조문단이 방문하여 조의를 표한 바 있음.

부록

1. 남북관계 주요일지 2. 남북회담 합의서



1. 남북관계 주요일지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1	4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북한에 대해 6자회담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 남북상 시대화기구 마련, 6.25 60주년 국군용사 유해발굴사업 추진 제의
	11	北 외무성 성명 - 정전 협정 당사국에 대해 평화협정 회담 개최 제의
	15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 우리측의 ‘급변사태 대비 비상통치계획’ 완성 관련 비난 - “청와대를 포함하여 이 계획 작성을 주도하고 뒷받침 하여 온 남조선 당국자들의 본거지를 송두리 채 날려 보내기 위한 거족적인 보복성전이 개시”
	19~21	「해외공단 남북공동시찰 평가회의」 개최(개성, 남북교류협력협회사무소)
2	1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 간 제4차 실무회담」 개최 - 우리측과 북측은 3통 문제 개선에 원칙적으로 합의, 3통 문제는 군사실무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 임금·숙소 등 현안 문제는 당국 간 실무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합의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8	「금강산·개성관광 관련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 우리측은 관광 재개를 위해 3대 조건 우선해결 촉구, 북측이 호응하지 않음에 따라 회담 종료
	23	신종플루 관련 손소독제 20만 명분을 개성 육로를 통해 북측에 전달
3	1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이 남한을 경제협력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고 한반도 평화 등 남북 간 여러 현안을 진지한 대화로 풀어야 함. 우리가 제안한 ‘그랜드 바젠’도 논의해야 할 것임.”
	2	「개성공단 3통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개최 - 북측은 개성공단과 동해지구 3통 관련 설비·자재, 장비를 우선 제공 요청
	4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남측이 금강산·개성관광 재개를 방해할 경우 관련 계약파기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위협
	15	통일부,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대북통지문 - 금강산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관련 진상규명 및 3대 조건 우선 해결 강조
	18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남통지문 - 3.25부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 실시 통보
	25~31	北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조사 실시
	26	北 천안함 폭침 사건 발생, 장병 46명 사망
4	8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성명 -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측(南) 부동산 동결 및 관리 인원 추방 등 선포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통일부, 북한의 일방조치 즉각 철회 촉구 및 당국 간 대화를 통한 해결 강조
	22~23	北 국방위 관계자 금강산 민간소유 부동산 조사
	27~30	北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동결 및 몰수조치, 우리측 관리인원 추방 통보
5	20	천안함 폭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 발표 -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인해 침몰
	24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사과 및 관련자 처벌 촉구, 앞으로 북한 도발 불용 및 적극적 억제 원칙 견지 통일·외교·국방 3부 장관 공동 기자회견, 남북교역 중단 등을 천명한 「5.24 조치」 발표
	25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는 것을 정식 선포”
	27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통고문 - “북남협력교류와 관련하여 우리 군대가 리행하게 되어 있는 모든 군사적 보장조치들을 전면철회”, “조선서해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하여 체결하였던 쌍방합의를 완전히 무효화” 등
	29~30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공동발표문 채택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6	6	이명박 대통령, 제55회 현충일 추념사 - “우리에게는 못다한 꿈이 있음. 그것은 바로 아직도 빈곤과 억압 속에 고통 받는 북녘 동포와 함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을 누리는 통일 조국의 꿈임.”
	11	北 국방위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 - 천안함 폭침 사건 안보리 회부를 반복 실천 행동이라며 국방위 검열단 수용 재차 촉구
	12	북한군 총참모부 중대포고 - 심리전 재개에 대해 선전포고라고 주장, 심리전 수단 청산을 위한 전면적 군사적 타격행동 진입 선언, 서울 불바다까지 내다 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 주장
	14	통일부 대변인, 6.15 선언 10년 정부입장 발표 - 6.15 공동선언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 이행 문제를 협의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 재확인, 천안함 폭침 사태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조치 및 핵개발 포기 결단 촉구
	27	北, 유엔사의 장성급회담 제의(6.26)를 거부하는 대남전통문 - 국방위 검열단 파견을 조건으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
7	6	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의 답변 -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검열단 파견과 이를 위한 「북남 고위급군사회담실무접촉」 개최 재차 주장
	9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 채택
	15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유엔사-북한군 판문점 대령급 실무접촉(1차) * 이후 7차(10.27)까지 개최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24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 한·미 연합해상훈련 관련 '핵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 개시' 위협
	24	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 - 미국이 대화를 거부한다고 비난하면서, 핵억제력 강화 및 강력한 물리적 조치 주장
	25~28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27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 비난
8	3	北 전선서부지구사령부 통고 - 우리측의 백령도·대청도·연평도 인근 수역의 해상훈련 관련 강력한 물리적 타격으로 임할 것이라고 위협
	5	개성공단관리위원회-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간 2010년도 개성공업지구 북한 근로자 월 최저임금 5% 인상 합의 (총지급액 5만 7,881달러 → 6만 775달러)
	8	우리측 선박 대승호(탑승선원 한국인 4명, 중국인 3명 등 총 7명)가 북측에 의해 나포
	9	北 서해 해안포 발사(백령도, 연평도 인근 해상)
	10	우리측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 서해 해안포 사격 관련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긴장 조성 중단 촉구
	15	이명박 대통령,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 분단상황 관리를 넘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화통일의 미래비전 제시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 평화·경제·민족공동체 등 한반도 통일과정 제시, 통일세 등 현실적 방안 논의 제안, 한반도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의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
	17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답변 -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 '통일세' 논의 제안을 전면적인 체제대결 선언이라고 비난
	25~27	지미 카터 前 미국대통령 평양 방문, 북한에 억류 중이었던 고클(Aijalon Mahli Gomes)와 동반 귀환
	26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북한 수해 관련 긴급 구호물자 지원의사 전달
	31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비상식량 등 총 100억 원 상당의 긴급구호물자를 신의주·개성지역에 단동·경의선육로를 통해 전달 통보
9	4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통지문 - 쌀, 시멘트 및 굴착기 등 복구장비 지원 요청
	7	대승호 선원 및 선박 귀환
	10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통지문 -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을 위한 「남북 적십자실무접촉」 제의
	13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수해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15	北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군사적 합의 이행 관련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 군사실무회담」 개최 제의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17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 남북이산가족 상봉일정 및 사전준비절차에 의견접근
	19	우리측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 北의 제의(9.15)에 대해 9.30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
	24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추석 계기 남북이산가족 상 봉행사 관련 협의
	28	北 노동당 제3차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을 신설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
	29	北 외무성 부상, 핵보유국 입장 강조 및 핵역지력 포기 불 가, 강화 입장 표명(유엔총회 연설)
	30	「제38차 남북군사실무회담」 개최(판문점 평화의 집) - 우리측 :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군 사적 위협·도발행위 및 비방중상 중단 촉구 - 북측 : 천안함 폭침 사건 조사결과 부인, 민간단체의 전단살포 중단, 검열단 파견 수용 주장 반복
10	1	「제3차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이산가족 상봉행사 (10.30~11.5 금강산이산가족면회소) 합의 및 「남북적십자 회담」을 개최(10.26~10.27 개성) 합의
	2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 관광지구 부동산 문제,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와 관련 당국 간 실무회담(10.15 개성) 제의
	12	통일부 명의 대북통지문 - 금강산관광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 관련 입 장 추후 통보하겠다는 의사 전달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14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당국 간 실무회담 조속 개최 촉구
	15	北 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대북심리전방송과 비라살포행위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수단과 비라살포지점들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
	18	남북항공관제 통신망 복원 * 10.16 북한 통신망 복원 통보(5.25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따라 5.26 통신망 단절)
	20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北에 수해지원 물자 전달 계획 통보 * 10.25 1항차 수해지원물품이 인천항을 출발, 단동에서 신의주로 전달
	26~27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11.25 후속회담 개최에 합의
	30~11.5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1차 : 10.30~11.2, 2차 : 11.3~5)
11	11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 논의를 위한 당국 간 회담(11.19 개성) 제의
	17	北의 11.11 대남전통문에 대한 대북전통문 발송 - 회담을 하려면 금강산지구 내 부동산 동결·몰수 조치부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 전달
	18	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 -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촉구 및 11월 25일 적십자회담에 해당 당국자들이 나와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관련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의

2010년		
월	일	주요일지
	23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우리측 4명 사망(해병대원 2명, 민간인 2명) 및 19명의 중·경상자 발생
	24	유엔사, 판문점 장성급군사회담 개최 제의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남북적십자회담」(11.25 예정) 무기 연기 통보 통일부,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 수해지원 잠정 유보 발표
	29	이명박 대통령, 北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 담화 - “앞으로 북의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
	29~ 12.1	서해 한·미 합동군사훈련 실시
12	18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연평도 포격 도발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필요성 강조
	20	우리측, 연평도 해상 사격훈련 실시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1	3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북한 동포들을 자유와 번영의 장정에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
	5	北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 - 南당국 포함 정당·단체들과의 대화 제의
	8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당국 간 회담 무조건 조속 개최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 재개(1월 말 또는 2월 말 상순) △판문점 적십자 통로 재개, 개성 경협사무소 동결 해제 등 제의
	9	통일부 대변인, 정부입장 발표 - “북한의 제의는 형식 등으로 볼 때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로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향후 북한 태도를 보아가면서 대응방향 검토”
	10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대남통지문 - 남북 당국회담 협의를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 제의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통지문 - 「남북적십자회담」 개최(2.1 문산) 제의 및 1.12부터 판문점 적십자 연락통로 운영 재개 통보 北 경제교류협회사무소 소장 명의 대남통지문 - 1.12부터 北 경제교류협회사무소 근무 재개 통보 통일부 대변인 논평,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한 정부 입장 발표 - 북한의 제의는 국제사회에 대한 위장평화 공세, 우리사회를 분열시키기 위한 상투적 전술의 일환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 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①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 약속 ②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 및 이를 위한 남북 당국 간 만남을 제안 - 북한이 제안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려면, 위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남북 당국 간 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함.
	12	<p>北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 대남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공업지구회담 개최(2.9 개성) 제의 <p>北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명의 대남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개최(2.11 개성) 제의 <p>北 경제교류협회사무소 소장 명의 대남통지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인원 미복귀에 대한 유감표명 및 정상운영 촉구 판문점 적십자 직통전화 운영 재개
	14	<p>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질문 답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화와 선의 조치에 호응해 나올 것을 촉구
	20	<p>北 인민무력부장 명의 대남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군사적 현안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이를 위한 예비회담 개최(1월 말) 제의 북한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정부입장 발표 -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의제로 하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에 나갈 것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해 별도의 고위급당국회담을 제의할 예정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26	<p>국방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2.11 판문점 ‘평화의 집’) 제의 <p>통일부 대변인 논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 문제에 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남북 당국 간 회동 제안 수용 촉구 <p>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들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려는 주장들을 경계 △한반도 핵 문제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과 적대시정책으로 산생된 문제로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대화방식이 필수적
	31	<p>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대남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국 간 대화 개최 재촉구
2	1	<p>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개최 제의
	8~9	<p>「남북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발언 : “천안호 사건은 철저히 우리와 무관한 사건”, “미국의 조종 하에 남측의 대북대결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특대형 모략극”
	8	<p>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과 선박 조속 송환 요구
	9	<p>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2.1 대남전통문에 대한 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십자회담 개최 원칙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일자 및 장소는 남북고위급군사회담 이후에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해 나갈 것을 제의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11	국회 여야 정당, 의원접촉·협상 관련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서한 접수
	23	北 국방위 검열단 진상공개장 발표 보도(조선중앙통신) - 연평도 포격 도발 책임전가
	27	북한군 판문점대표부 성명 -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 “서울불바다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
3	1	이명박 대통령 3.1절 기념사 - 북한에 대해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나설 것을 촉구
	3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2.5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으로 온 북한 주민 31명 중 복귀 희망 27명 송환 통보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송환할 것을 요구
	7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북한 주민 31명 전원 송환 요구 및 4명 귀순 주장 관련 대면 확인 요구
	8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송환 희망 27명에 대한 필요조치 협조를 촉구, 귀순의사 밝힌 4명의 자유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실무협의 입장 통보
	9	판문점 연락관 전화통화를 통해 대북구두통지 - 27명의 조속한 신병 인수 촉구
	15	南 방송통신위원장 명의 대북서한(→北 체신상) 전달 - GPS 주파수 혼신행위 항의 및 재발방지 촉구(北 접수거부)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17	北 지진국장 명의 대남전통문 - 백두산 화산활동 관련 연구사업 공동추진 등을 위한 협의진행 제의
	22	南 기상청장 명의 대북전통문 - 백두산 화산 협의 관련 북측 제의에 동의
	23	北 전선서부지구사령관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우리측 단체의 3.25~3.26 백령도에서 비라 살포 계획 관련 직접 조준격과 사격 위협
	27	월선 북한 주민 27명과 선박을 서해상을 통해 송환(4명은 잔류)
	29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개최(문산, 남북출입사무소)
	30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귀순 주장 4명의 대면 확인 재차 요구
	31	北 국방위 대변인 담화 - 천안호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책임 재차 부인 투명성 강화 조건하에 민간차원 취약계층 대북지원 재개
4	8	北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 - 현대측에 준 ‘금강산관광 독점권 조항’의 효력 취소 입장 통보
	12	「제2차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개최(개성, 자남산여관) - 5월 초 평양(또는 편리한 장소) 학술토론회, 6월 중순 백두산 현지답사를 하기로 합의, 구체적 실무절차 추후 협의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14	北 '10.11월 미국공민 체포·조사, 재판 기소 준비 보도(조선중앙통신)
	22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귀순한 북한 주민 4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 北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대북 전단 관련 조준격파 사격범위를 전면격파 사격으로 넓히겠다”고 위협
	26~28	지미 카터 前 미국대통령을 단장으로 한 더 엘더스(The Elders) 그룹의 실무진 방북(평양)
	27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귀순 4명 자유의사 확인 문제와 북한 지역에 억류된 우리 국민 자유의사 확인 문제 논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5.4 판문점 ‘평화의 집’) 제의 北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 南 동북아역사재단에 동해 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공동대처 제의
	28	「백두산 화산 관련 남북전문가회의」 남측 수석대표 명의 대북전통문 - 백두산 화산 문제 관련 학술토론회 개최 (5.11~5.13 서울 또는 평양) 제의
	29	北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발표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 南 동북아역사재단 명의 대북전통문(4.27 제의에 대한 답신) - 5월 중순 개성에서 동해표기 관련 남북역사학자 간 협의 제의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5	3	농협전산망 장애(4.12) 관련 수사결과 발표 -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확인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사이버 테러 행위 즉각 중단 촉구
	9	이명박 대통령, 한-독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한다면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 회의에 김정일 위원장 초청' 제안
	10	北 국방위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 - 농협해킹을 날조극이라고 비난
	11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5.9)을 반공화국 핵소동과 대결 책동을 정당화해 보려는 발언이라고 비난
	24	로버트 킹 美 대북인권특사 등 북한식량평가팀 방북
	28	로버트 킹 美 대북인권특사, 석방 미국인과 함께 귀환
	30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 남측과 상대를 하지 않을 것이고, 거족적인 전면공세에 진입하며, 실제적 행동조치로 동해지구 군 통신 차단 및 금강산지구 통신연락소 폐쇄 주장
6	1	北 국방위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남북 비공개 접촉' 폭로 통일부 대변인 논평 - 北 보도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북한의 태도에 유감 표명
	2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채택 발표(조선중앙통신)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3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 '최고 존엄' 표적사격 관련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 진입 위협
	6	이명박 대통령, 제56회 현충일 추념사 - “北은 대결과 갈등의 길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함.”
	9	北 국방위 정책국 대표 남북 비공개 녹음기록 공개 위협 (조선중앙통신)
	16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북한 주민 9명 송환 요구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북한 주민 9명 모두 귀순을 희망하고 있는 바, 본인들 의 자유의사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통보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통고 보도(조선중 양통신) - “몰수된 재산들의 처리 문제 협의를 위해 남측 당사자 들이 금강산에 들어올 것”
	29	北 정부 대변인 성명 - 우리측(南) 전방부대 구호 사죄와 주모자 처벌을 요구, 보복성전 위협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산 관련 문제 협의(민관합동협의단)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전방부대 구호 관련 군사적 보장조치를 강한 제재조치 로 전환 주장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명의 편지(→청와대) 공개보도(조 선중앙통신) - 전방부대 구호 관련 사죄와 주모자 처벌 및 구호 철거 등 요구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30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답변 - 특구 내 남측부동산 정리를 위한 협상(6.29)이 통일부의 방해책동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비난 7.13까지 금강산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들에 대해서는 재산권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해당한 법적처분 강행·통지 주장
7	13	민관합동협의단 방북(금강산), 금강산 관광사업 재산 문제 협의
	2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계기 제1차 남북비핵화회담 개최(인도네시아 발리) - 南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北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29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보도(조선중앙통신) -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내의 모든 남측 부동산들과 재산들에 대한 법적 처분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선포
8	3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전통문 - 북한 지역 수해피해 관련 물품지원 의사 전달
	4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 대남전통문 - 생필품·의약품 보다 식량·시멘트 등의 지원을 요구
	10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 대북통지문 - 수해지원 물자 품목·전달경로·시기 등 통보 현대아산 사장 등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12	월선(8.11) 북한 주민 4명, 판문점 통해 송환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15	이명박 대통령, 제66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은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 △어린이와 자연재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것
	18	월선(8.16) 북한 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송환
	19	현대아산 관계자 금강산 방북, 금강산 재산권 문제 협의
	22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조선중앙통신) - “남측 재산들에 대한 법적처분 단행, 남측 기업 물자·재산 반출 중지”
	23	금강산 체류 우리측 인원 14명 추방
	28~9.2	北 라선-금강산 시범관광 실시, 8.28 中 연길 출발, 9.2 北 라진항 복귀
9	3~7	대한불교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등 방북 ※ 천안함 폭침 사건('10.3.26) 이후 종교단체 첫 방북, 이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등 종교·학술 단체의 방북 성사
	12~15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유니세프 친선대사 방북(평양)
	21	이명박 대통령, 제6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 “북한이 상생과 공영의 길을 택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이를 기꺼이 도울 것” 제2차 남북비핵화회담 개최(중국 베이징) - 南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北 리용호 외무성 부상 등
	30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개성공단 방문, 개성공단 현장 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10	1	北 체신성 대변인 담화 - 反北 TV방송 등 규탄(조선중앙통신)
	4	일본 표류(9.13) 탈북자 9명, 인천공항 통해 입국 북한 주민 2명, 동해상으로 월선, 귀순의사 표명
	6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동해 월선 북한 주민 2명 및 일본 표류자 9명 송환 요구
	8	北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단장 명의 대남통지문 - 삐라살포 등 비난
	11	통일부 대변인 발표 - 「5.24 조치」로 공사가 중단된 기업에 대한 공사 재개 허 용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조치
	17~20	남·북·미 3자 민간 학술회의(조지아대)
	18~20	미·북, 미군유해 발굴 회담(방콕)
	20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이명박 대통령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비난
	24~25	미·북 제네바 협의(北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美 보즈워 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11	9~15
8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 재개 ※ '09년 정부가 WHO에 지원한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예산 중 보류되었던 기초의약품·의료장비 지원과 의료시설 개보수 사업 관련 예산 700만 달러 집행 허용
22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 착공 조계종 중앙신도회, 약탈 문화재 환수 실무협의 관련 방북(개성)

2011년		
월	일	주요일지
	24	북한군 최고사령부 보도 - 연평도 포격 도발 1주년 남측 軍합동훈련 관련 비난
	30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 저농축우라늄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
12	7~11	글린 데이비스(Glyn Davies) 美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클리포드 하트(Clifford Hart) 美 국무부 6자회담 특사 방한
	15~16	미·북, 영양 지원 관련 협의(중국 베이징)
	19	北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보도
	20	통일부장관,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정부담화 발표
	26	이희호 여사, 현정은 회장 등 김정일 조문차 방북
	30	北 국방위원회 성명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비난 - “리○○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 “우리에 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1	2	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음.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 갈 수 있을 것임.” 통일부장관 신년사 - “북한의 새 지도부는 개방과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을 하기 바람.”
	16	AP통신 평양지국 개설
	31	北, 「인천 평화컵 유소년 축구대회」(1.31~2.3 中 淸明) 불참 통보
2	7	산림청장, 북한 국토보호상 앞으로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문제’ 협의 관련 대북통지문
	10	외통위·남북관계특위 소속 국회의원 개성공단 방문
	14	대한적십자,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19	北 남북장성급회담 북측단장 명의 대남전통문 - 서해지역 해상사격 훈련 시 보복대응 위협
	23~24	제3차 미·북대화(중국 베이징)
	27	국회, ‘북한이탈주민 강제복송 중단 촉구 결의안’ 통과 중국 외교부 푸잉 부부장 방북(2.20~24)
	29	미·북 간 「2.29 합의」 발표(워싱턴, 평양 동시) - △비핵화 사전조치(장거리미사일·핵실험·우라늄농축활동 등 등 모라토리엄,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복귀 등) △영양식 24만 톤 지원 △미·북 관계개선 등 합의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3	2	북한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우리측(南) 군부대 내무반에 부착된 구호 관련 비난 - “물리적 타격을 기본으로 한 우리 식 성전은 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모든 행위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리○○역도와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 *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규탄 군중대회, 국방위 기자회견 등이 이어짐.
	7~8	대북 영양지원 관련 미·북 실무협의(중국 베이징)
	14	정명훈, 北은하수관현악단-라디오프랑스필하모닉 합동공연 지휘(프랑스 파리)
	16	北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실용위성’ 발사계획 발표
	16~4.13	北조선중앙통신-美AP통신 뉴욕 공동사진전
	19	北 장거리 미사일 관련 우리 정부입장 발표 -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핵무기의 장거리 운반수단을 개발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미·중·일·러·EU 등 관련국 정상들과 협의하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할 것”
	19~4.2	남북 종교단체 협의(중국 베이징, 심양)
	21	美 국방부, “미사일 발사계획 등으로 유해발굴작업 유보” 발표
	26~27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미·중·러·일 등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지 촉구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27	통일부장관, 핵안보정상회의 내·외신 브리핑 - 北의 평화와 발전을 향한 좋은 선택과 남북대화 호응 촉구
4	10	통일부 대변인 논평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강행 움직임에 대한 경고
	11	北 노동당 제4차 당대표자회 개최, 김정은을 ‘당 제1비서’·‘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추대
	13	北 장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규탄성명 발표(외교 통상부장관) 北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개최, 김정은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
	16	유엔, 北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벳 연설 - 북한이 살 길은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임을 강조
	17	北 외무성 성명 -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배격하며 2.29 조·미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 주장
	18	北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훼손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
	20	이명박 대통령,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최고위과정 강연(삼청동 회담장)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 “국민들이 통일을 생각해야 함.” “통일항아리를 만든 자체가 의미”
	23	북한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 “혁명무력의 특별행동 곧 개시”, “지금까지 있어본 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의 방법으로 도발근원 초 토화”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대남위협·비난 즉각 중단 촉구
5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 청송연합 등 북한 3개 단체 추가제재 결정(총 11개 단체)
	4	북한 식량차관 원리금 상환기일(6.7) 통보(南 수출입은행 → 北 조선무역은행)
	6	北 외무성 대변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공동 성명 채택 및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 발전 추진 주장
	12	통일부장관, ‘통일항아리’ 제작 행사(경북 문경)
	16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남북협력기금 목적 확대, 통일계정 설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근거 마련 등
	18	北 체신성 대변인 회견 - 우리측의 ‘北의 전파교란’ 주장을 “새로운 모략·날조극”으로 비난
	19	G8 정상회담 공동성명 - △北 도발 깊은 우려 △추가도발 시 상응하는 조치 위해 유엔안보리 소집의지 확인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6	4	북한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 우리 언론사 좌표를 확정해놓은 상태라고 위협 통일부 대변인, 협박행위 즉각 중단 촉구
	8	북한 식량차관 상환촉구 대북통지문
	11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공개질문장 발표 - “남측의 전직, 현직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일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음.”
	19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기인 총회
	23	‘통일항아리’ 제작 완료
7	2	이명박 대통령, 국회개원 연설 - “통일준비의 핵심중 하나는 통일재원 마련”,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평화통일, 서둘러 준비해야 할 단계”, “북한 인권 문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
	5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이탈북주민 박인숙 재입북 관련 “우리 주민들에 대한 괴뢰패당의 비열한 유인, 랍치책동과 인권유린만 행의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
	6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체포 관련 “남조선통일애국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폭압”이라고 강변
	12	‘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발대식 및 통일항아리 토크쇼 개최
	1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 “한반도 문제 관련국은 어떠한 추가 도발을 해서도 안 되고 유엔안보리 결의와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을 준수해야 함.”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15	北 노동당 정치국회의 진행 (7.16 조선중앙통신 보도) - “리영호를 신병관계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
	16	대통령,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日 민주당 마에하라 세이지 의원, 통일부 장관 예방 및 통일준비 성금 전달 통일부 대변인 논평 - “정부는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식량차관 상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괴뢰정보기관의 지령을 받고 우리 공화국에 침투하여 동상과 대기념비를 파괴하려던 자들이 적발, 체포되었음.”
	17	北 김정은에게 ‘공화국 원수’ 칭호 수여 (7.18 ‘중대발표’로 보도)
	18	통일부장관, 국회의장을 예방하여 통일항아리 전달 - 강창희 국회의장, 통일항아리에 금일봉 기부 통일부장관과 차관 및 고위공무원단, 통일항아리에 성금 기부
	19	北 특대형 테러행위 가담자라는 ‘전영철’ 국내외 기자회견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20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 ‘전영철 사건’ 관련 “특대형 음모에 미국이 깊숙히 개입했다는 진상이 드러났다”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핵 문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25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핵억제력을 먼저 내놓을 수 없게 될 것”
	29	北 국방위 대변인 성명 - ‘전영철 사건’ 관련 “실제적인 초강경대응”, “강한 물리적 대응공세” 등 對美 위협
	31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 ‘전영철 사건’ 관련 “특대형 국가정치테로범죄에 대해 공식 사죄하고 책임 있는 주모자들을 엄중히 처벌”(김성민·박상학·조명철·김영환 실명 거론)
8	7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통일계정 신설) 국무회의 통과
	8	대한적십자사,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협의를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9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5.24 조치」 해제·금강산관광 재개를 구실로 우리측 제의(8.8) 사실상 거부
	15	이명박 대통령, 제67주년 광복절 경축사 -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음.”
	19	北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등 대남단체, ‘UFG훈련’ 비난 합동성명 발표
	20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자연맹(IFRC)을 통해 북한에 수해 복구 관련 10만 달러 지원 발표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24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 수해지원 협의 관련 방북 (개성)
	25	北 ‘8.25 경축연회’ 김정은 연설 -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으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수표”
	27	국토해양부장관 명의 대북 전통문 발송 - 2009년 남북간 합의대로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시 우리측(南)에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
	31	北 외무성 비망록 -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핵 억제력을 현대화·확장’
9	3	대한적십자사, 대북 수해지원을 위한 실무접촉 제의
	12	北 수해지원 관련 지원 품목 및 수량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지원 거부 통보
	25	北 최고인민회의(제12기 제6차) 개최 -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법령 발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2명의 보선과 예산위원회 위원장 교체
	27	통일부, 북한 식량차관 상환 촉구 대북 통지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관련 “새누리당의 술수에 속지 말아야하며 제2의 유신독재 부활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
	28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어제(9.27)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이 우리 내부의 대선과 관련한 명시적 언급을 한 것은 도를 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 촉구”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29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 “NLL은 미군이 일방 설정한 유령선,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연평도불바다를 재현하겠다는 대결선언”이라고 비난
10	6	북한군 하전사 1명, 경의선 남북관리구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
	10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미제와 결탁한 대북선제 공격선포”로 규정하고, “우리(北)도 강력한 물리적 힘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위협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대북 적대시정책의 새로운 산 증거”라며, “우리(北)가 침략의 본거지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주장
	13	금강산 신계사 복원 5돌 기념 ‘남북불교도합동법회’ 개최
	15	북한 어선 1척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통신 후 복귀
	18	이명박 대통령, 서해 연평도 방문 - “우리 군은 통일이 될 때까지 북방한계선(NLL)을 묵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 선을 잘 지키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19	北 서부전선사령부 공개통고장 - ‘민간단체 전단살포(10.22) 관련, 임진각과 그 주변 조준격파사격 대상, 움직임 포착 시 경고 없이 타격, 해당 지역 남한 주민 미리 대피할 것’ 등 위협 북한 어선 1척 연평도 서북방 북방한계선(NLL) 월선, 우리 군의 경고 통신 후 복귀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19~20	통일부, 민간단체를 방문하여 전단살포를 자제할 것을 요청
	20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 “조선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우리(北)와의 협의도 없이 미국이 제멋대로 그어놓은 북방한계선은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정전협정에 전면 배치되는 유령선”이라고 주장 北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 ‘대통령 연평도 방문(10.18) 발언 관련, 북방한계선(NLL)은 유령선·비법적인 선, 북한이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 등 주장
	22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북한은 민간단체의 행동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민간단체도 남북관계 상황 및 북한의 위협 등을 감안하여 전단살포를 자제할 필요가 있음.”
	25	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 발언(“북한 위협적 행동 중단” 등) 관련, “9.19 공동성명 이행 의무를 미국은 하지 않고 우리(北)에게만 하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 북한 경비정 1척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침범, 우리군의 경고 사격 후 복귀
11	3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 “남한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정권교체를 기어이 실현해야 할 것”
	4	北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 결정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6	이명박 대통령, “북한 대선개입 시도 철저히 대비” 지시 - “안보의 경우 북한의 무력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재입북(再入北) 북한이탈주민 부부 내·외신 기자회견 개최 - 김광혁(‘08.3. 탈북)·고정남(‘08.9. 탈북) 부부는 “남한에서 비참한 생활을 겪으며, 더 있어야 죽음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난 9월 12일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왜곡 선전
	9	北, 북-일 정부간 회담계획 발표(11.15~16, 울란바토르)
	15	北 김정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축전 개성 영통사 낙성 7주년 및 의천 다례재 합동법회
	19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 - “북한이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하며,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해서 북한의 보다 성의 있는 조치가 있기를 바람.”
	21	北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 조선인민군 신문사 문답 - 우리 정부의 ‘연평도 포격 도발(11.23) 2주기 기념행사’ 계획에 대해 “제2의 연평도 불바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22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문답 - 우리 정부(南)의 외국인 대상 금강산관광 중단 촉구 관련 “엄중한 주권침해행위이며, 관광 재개를 위해서도 대결광신자들의 재집권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난
	27	北, 북-일 회담 개최계획 발표(12.5~6, 베이징)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29	중국 리젠귀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일행 방북 (11.29~30)
	30	北 김정은, 중국 공산당 대표단 면담 및 시진핑 친서 접수
12	1	北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 발표 - ‘김정일 동지의 유훈’, ‘강성국가 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 ‘지난 4월에 진행한 위성발사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분석하여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정밀도를 개선’ 외교통상부 대변인 - 미사일 발사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 요구 -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한 엄중한 도발이자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박근혜 후보의 대북정책 선거공약 관련 ‘공개 질문장’ 발표 - ①6.15, 10.4선언 이행 ②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통일 ③先핵포기 ④한·미동맹 강화 ⑤북한인권법 제정 ⑥5.24조치 해제 ⑦現정부 대북정책 승계 여부 등 일본 정부, 북-일 회담(12.5~6, 베이징) 연기 발표
	4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입장 표명 - “북한의 로켓 발사계획을 매우 우려한다.” 중국 외교부 입장 표명 -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의 큰 틀에서 출발해 신중히 행동하기 바란다.”
	5	제2하나원 개원식 개최
	8	北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진상공개장 발표 - “남한 당국이 금강산관광 파탄의 장본인” 등으로 왜곡, “어떤 구실 없이 반드시 재개” 주장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9	北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기 조절 가능성 언급 - ‘발사를 위한 준비사업을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 ‘그 과정에 일련의 사정이 제기되어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발사시기를 조절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
	10	北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발표 - ‘기술적 결함이 발견되어 위성발사 예정일을 12월 29일 까지 연장’
	12	09:49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10:30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이명박 대통령 주재) 11:50 정부성명 발표(외교통상부장관) -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서 한반도와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이며 위협’,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강행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 및 대북 규탄 성명 후 대북제재 논의 착수 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질문·대답에서 ‘합법적 위성 발사 권리’ 주장 -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평화적 사업’ △‘미사일 발사를 도발, 정세 긴장요인으로 보려는 것은 대북 적대시 관점’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20	北, 특별한 논평없이, 18대 대통령 당선 사실만 간략 보도 - ‘남한 대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새누리당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당선’ 국방부, 12.22~1.2간 애가봉 점등계획 발표

2012년		
월	일	주요일지
	21	<p>「2012 국방백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규정</p> <p>北, 미국인 배준호씨 억류사실 발표</p> <p>- △反공화국적 대범죄 감행하여 해당기관 억류 △본인의 범죄행위 인정 등 언급</p>
	23	<p>北, 애기봉 등탑 점등(12.22~1.2) 비난 및 도발 위협(조선중앙통신)</p> <p>- △“국방부(南)의 종교단체 요청 구실은 여론비난 모면용 술책” △“역적패당의 반공화국 심리전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p>
	25	<p>北, 애기봉 등탑 점등 관련 사실 왜곡·비난(노동신문)</p> <p>-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킴으로써 대결정책이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을 꾀하고 있다.”</p>

2013년		
월	일	주요일지
1	1	<p>이명박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p> <p>- “튼튼한 안보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북한 주민의 마음과 삶속에 시작된 조용한 변화의 움직임이 통일의 큰 물결로 넘쳐흐르길 소망”</p> <p>北 김정은, 김일성 사후 처음으로 육성으로 ‘신년사’ 발표 (조선중앙통신 등)</p> <p>- 위성발사 성공 등을 주요성과로 제시하면서 '13년 경제 강국 건설을 핵심과제로 제시</p>
	3	<p>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p> <p>- 이명박 대통령의 NLL 고수 발언 등 비난 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p> <p>- △“민족 재앙의 화근을 뿌리 채 들어낼 것” △“동족대결에 매달리면 전쟁을 피할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기치 밑에 반통일 대결세력 반대투쟁에 나설 것” 등 천명</p>
	7	<p>美 구글회사 대표단(단장 : 빌 리차드슨 前 뉴멕시코 주지사), 평양도착(3박 4일 일정, 조선중앙통신)</p> <p>中 경제무역 대표단(단장 : 린진짜오 상무부 부부장), 「중·북 경제·무역·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 참가차 평양 도착(조선중앙통신)</p>
	9	<p>北, '12.12.20 이후 20여 일만에 대통령 당선인 관련 보도 (조선신보)</p> <p>- 대통령 당선인 관련 “선거공약이 빈말인가 어떤가를 지켜 볼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라고 주장</p> <p>* “남조선이 반민족인 자세와 입장을 버리지 않는 한 북남관계는 파국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북남선언 이행만이 대결상태 해소를 위한 현실적 방도” 라고 주장(노동신문)</p>

2013년

월	일	주요일지
	12	北, '이명박 정부 5년 백서'의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성과' 관련,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백서 발간 중단'을 주장 (평양방송)
	14	北, '통일부 통일 향아리' 관련, '흡수통일을 꾀하는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의 대결심보가 빚어낸 분열단지'라고 왜곡·비난(평양방송)
	15	北, 북방한계선(NLL)의 해상경계선 공식화 관련,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 무법의 유령선"이라고 주장(평양방송)
	18	北,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을 악몽의 5년, 공포와 절망의 5년이라고 비난(조선중앙통신) - 용산철거민 농성, 미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등 거론
	23	北 외무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관련 반발 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 등) -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배경 △위성발사권리 계속 행사 △미국 적대시정책 불변시 조선반도비핵화 불가능 (비핵화 대화 중단) △미국의 제재에 대처 물리적 대응 조치 취할 것 등 주장 * 유엔 안보리 1,22 15:10(한국시간 23일 05:10),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제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 통일부, 중국 하이난성에서 개최(1.24~27)되는 '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우리측 선수단에 대한 '북한주민접촉' 승인
	24	北 국방위원회 성명 발표(조선중앙통신 등) - 미국과 추종세력에 대한 '전면 대결전' 진입 선언 - "우리가 계속 발사하게 될 여러 가지 위성과 장거리 로켓, 높은 수준의 핵실험도 미국을 겨냥하게 될 것."

2013년		
월	일	주요일지
	27	北, 중국 하이난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3회 인천 평화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 폐막식 결승에서 우리측(南)과의 경기 거부 *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남북경기 무산
	28	北, “박근혜 정부가 6.15 정신으로 돌아설지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조선신보) - “6.15 정신으로 돌아와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오는지 온 겨레가 주목하고 있음.”
	29	北, 우리측(南)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참여’ 등 비난(조선중앙통신) - “동족대결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北)와 마주앉을 생각을 하지 말라”
2	2	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대담 시 - “北 위성발사는 부정하며 南 위성발사는 감싸주는 미국은 이중기준과 철면피성의 극치라며, 자주권 수호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했다고 언급
	5	北, 韓·美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방안 관련 - “선제공격 시도 시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된 타격을 안기고 전쟁을 승리로 결속할 것”이라고 위협(민주조선)
	7	北, 새누리당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망둥”이라고 지속 주장(조선중앙방송)
	8	北 국가적 중대조치 및 핵보유 정당성 강조 - 국가적 중대조치는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대응하여 민족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으로, “미국의 조치에

2013년

월	일	주요일지
		<p>상응하여 초강경조치를 취하리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위협(통일신보)</p> <p>* 同 매체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저들 방식의 가설과 논리로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다고 지레짐작”, “국가적 중대조치에 대해 꼬물만큼도 모르면서 설레발을 치는 행태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주장</p>
9		<p>北,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이후 우리측 대응에 대한 비난 강화</p> <p>- “미국과 남한은 유엔헌장 7장 42조(무력제재)를 추가하려 한다”며, “경제제재든 군사제재든 준비되어 있고, 반공화국 제재는 곧 선전포고이며 전쟁”이라고 엄포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p>
11		<p>北, 南정승조 합참의장 발언(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타격) 관련</p> <p>- “침략적 기도에 근거한 반공화국 적대시책등”이라 비난 (노동신문)</p>
12		<p>北 3차 핵실험 강행(11시 57분, 함북 길주군에서 진도 4.9 관측)</p> <p>北 “제3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발표(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p> <p>* 北 핵실험(오전 11:57) 이후 2시간 46분만에 핵실험 사실 발표</p> <p>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이번 핵실험은 최대한 자제력을 발휘한 1차적 대응조치, 미국이 적대적으로 나오면 강도 높은 2·3차 대응조치 취할 것” 위협(조선중앙통신)</p> <p>국방부(南), 북한 핵실험 감행 공식 확인(한·미연합사와 정보공유)</p>

2013년		
월	일	주요일지
		※ 유엔안보리·미·중·일·IAEA, 北 제3차 핵실험에 대해 성명 등 발표 - △유엔안보리(강력규탄, 추가재제 논의 착수) △美 백악관 성명(심각한 도발 행위) △中 외교부 성명(단호히 반대) △日 총리 성명(매우 유감) △IAEA 성명(안보리 결의 명백히 위반)
	14	박근혜 당선인, “새 정부, 北핵무장 용인 안할 것”, “북한의 핵실험은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택한 것”,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님” 언급 南 국회, 북한의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 -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 - 핵물질·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NPT와 IAEA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
	19	유엔 스위스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북한대표(전용룡)는 “최근 핵실험 이후 2차, 3차조치를 할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하겠다”고 위협
	25	제18대 대통령 취임식 - 박근혜 대통령, “경제부흥·국민행복 이루겠다.” ※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로 총리·장관 없이 박근혜 정부 출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남과 북은 2010년 10월 1일 개성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 7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한다.
 - ① 상봉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2010년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북측 방문단이 재남가족 상봉을 실시하고,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측 방문단이 재북가족 상봉을 실시하기로 한다.
 - ③ 생사확인회의서는 10월 5일에 각각 200명씩, 회보서는 10월 18일에, 최종명단은 10월 20일에 교환한다.
 - ④ 이번 상봉 장소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금강산호텔>로 한다.
 - ⑤ 쌍방은 상봉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포함한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성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진행한다.
3.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0년 10월 1일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김 의 도

북남적십자 실무접촉
북측 대표단
단장 박 용 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합의서〉

남과 북은 2011년 3월 29일과 4월 12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분출에 대한 공동연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학술토론회를 5월초 평양 또는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3. 남과 북은 백두산 화산에 대한 현지답사를 6월 중순에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상기와 관련 구체적 실무절차에 대해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

2011년 4월 12일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백두산 화산 공동연구를 위한

남북실무접촉

남북실무접촉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

북측 대표단 단장

유 인 창

윤 영 근



남북대화

제75호 2010.1~2013.2

발행처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110-230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산2-28
Tel. 02-2076-1043
Fax. 2076-1230

디자인 제작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쇄일 2013년 2월 25일

발행일 2013년 2월 28일

